

##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이 제출하여 월 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「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# 1. 제정이유

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
-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“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”의 범위를 정의하고, 의무 대상 면제 자동차의 기준 마련(안 제3조)
  - 특정경유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2.5톤 이상인 자동차
- “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” 기준 마련(안 제4조)
  -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
- “저공해 조치 기간 및 이행기간 유예” 기준 마련(안 제5조)
  -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
- “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”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7조)
  - 1회(중복×)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

### 3. 검토의견

○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

○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,

○ 안 제1조(목적)는 조례입법의 “기술(記述) 원칙”을 준수하기 위하여 목적문안은 “...에 따라, ...을 위하여, ...에 관한(필요한) 사항을 정함”으로 기술하여야 하므로 “따른”은 “따라”로 간접목적(“위하여”) 문안을 추가적으로 반영이 필요하고

○ 조례입법의 “한정성 원칙”을 준수하기 위하여 “안산시”로 한정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“규정”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“정함”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☞ 수정방향 (내용 일부 수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및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라 안산시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조례입법의 “체계성 원칙”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“저공해 조치”는 기본적 사항이므로 제3조를 신설하여 “안산시장의 명령 또는 권고”에 대한 부분을 제1항에 정하고, “저공해 조치 방법”을 제2항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☞ 수정방향 (제3조 신설)

제3조(조치 및 방법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지역의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명하거나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, 조치명령, 조치기간, 폐차권고 등의 방법에 따른다.

○ 안 제5조(저공해 조치 기간)는 조례입법의 “간결성 원칙”을 준수하고자 조의 제목 중 “저공해”는 간결하게 삭제하고, 조례입법의 “명확성 원칙”에 의거 제2항에서 유예권자 “시장”을 문두 주어로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이 문구의 명확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같은조제2항에서 조례입법의 “기술(記述) 원칙”을 준수하여 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“다음 각 호”로 처리하고 둘 중 하나를 충족해도 유예 대상이 되므로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추가로 기술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의거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☞ 수정방향 (조의 제목변경, 내용 수정)

제6조(조치기간)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(제1호의 경우는 검사유효기간을 말한다. 제3항에서 같다)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.

1. 특정경유자동차가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때

2.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때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기간을 유예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
○ 안 제6조(자동차 정비 권고 등)에서 조의 제목은 조례입법의 “간결성 원칙”을 준수하여 “자동차”는 “(특정경유)자동차”와 반복되므로 자동차는 삭제하고, 조의 내용도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“제1항☞ 정비권고, 제2항☞ 폐차권고”분리하여 조의 제목은 “정비·폐차 권고”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☞ 수정방향 (조의 제목 변경, 내용수정)

제7조(정비·폐차권고)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더라도 해당 배출가스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를 선행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자동차 정비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정비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조치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.

- 안 제7조(재정지원)에서 조례입법의 “기술 원칙”을 준수하여 해당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“다음 각 호”로 처리하고 둘 중 하나를 지원하는 경우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☞ 수정방향 (내용일부수정)

제8조(재정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필요한 경비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5조의 조치명령
2. 제7조의 조기폐차

- 조례입법의 “체계성 원칙”을 준수하여 정할 사항에 관계없이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“시행규칙”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.

☞ 수정방향 (조항신설)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및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나,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 1부.